‘참여정부 임명직 사퇴 요구’ 총선 쟁점 급부상

여 ‘좌파 인사 퇴진’ 색깔 공세 야 ‘신 공안정국 만드나’ 반발

참여정부에서 기용된 임기직 산하기관장의 사퇴 압박이 4·9총선의 초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은 13일 ‘좌파 인사 퇴진론’으로 거듭 압박했고, 야권과 당사자들은 공천탈락자 자리 마련을 위한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이번 총선에서 구정권 임기직 기관장 사퇴 압박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효과를 봤던 ‘좌파 정권 심판론’을 쟁점화하고 있으며, 야권은 ‘총선용 색깔공세’라며 법에 규정된 임기는 지켜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청와대 보고회도 참석 말라”=‘구정권 임기직 교체론’의 불씨를 처음 지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그 정권의 이념과 철학에 맞춰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새 정부가)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옳은 일”이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연주 KBS 사장이 사퇴 1순위”라면서 “버티겠다는 사람들의 ‘강짜’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국민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은 참석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향후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참석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드인사 하겠다는 거냐?”=야권은 이에 대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학계, 문화계, 시민단체, 종교계 모두 좌파다 우파다 성향 분석을 해서 신공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총선용 색깔 공세이자 공천 탈락자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학계, 문화계에 코드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우상호 대변인도 “공기업이나 주요한 기업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한나라당이) 강남 땅부자를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교체 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정연주 KBS사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정은숙 국립오페라 단장 등도 물러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격 시동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적 핵심 과제를 다루는 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정부의 핵심…‘경제살리기’ 총괄

월 1회 대통령 주재…규제 개혁·대형국책사업 추진

1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를 다루는 기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특별’이란 수식어를 떼고 명실상부하게 법적 근거를 갖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출범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각종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소위 이명박 정부의 꽃으로 불린다. 새 정부의 모든 핵심 어젠다를 취급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매월 1회 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한 것이 단적인 예로, 위원회의 위상을 가늠케 해 준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사공일 위원장 이외에 정부 관계자 및 민간인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산하에 ▲한반도 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투자유치 ▲공공혁신·규제개혁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7개 추진단을 두고 있다.

추진단 별로 해당 분야의 과제를 점검한 뒤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최소 그 다음 회의까지는 최종 결과물을 내놓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기간 6개월 이내 단축 방안을 확정한 것처럼 매월 굵직굵직한 사안을 최소한 한개 정도 확정해 발표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별 과제를 보면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의 경우 국민적 여론수렴 작업은 물론이고 실무 추진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유치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다루게 된다. 새 정부는 올해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운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서는 신물질 개발과 미래첨단장비 개발 등이 주축이 될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을, 새만금 추진단에서는 새만금 일대를 관광, 첨단물류, 바이오, 항공우주 등을 망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각각 논의한다.

공공혁신·규제개혁 추진단은 말 그대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각종 규제개혁 업무를 맡는다.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4·9총선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대통령 자문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도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폭발’ 박근혜… 탈당 불사?

영남권 공천을 앞두고 당내 공천 상황에 직격탄을 던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이 숨을 죽이고 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잘못된 공천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이제까지 공천 결과에 격분을 토로한 박 전 대표는 영남권 심사가 시작되는 13일엔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도 “어제 회견에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면서 “본인이 ‘일단 지켜보자’고 한 만큼, 영남 공천의 추이를 본 뒤 추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영남권 공천에서 본인이 제시했듯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숙청’이 이뤄질 경우 탈당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총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한 핵심 측근은 전날 박 전 대표가 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신뢰가 사실상 깨졌음을 시사하면서 향후 당 화합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박 전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넘어서 수족까지 다 자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탈당 카드도 접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영남권 공천 결과가 사실상 ‘계파 말살’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총선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탈당 수순을 밟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측근들의 낙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 ‘계파 챙기기’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로서는 명분이 약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최고위원을 비롯해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 이른바 ‘핵심’ 측근들은 살아남고 나머지 계파 의원 다수가 낙천하는 경우, 박 전 대표가 당을 나가지는 않고 당의 총선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탈락한 친박 의원들 다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표가 회견에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당내 화합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고, “(탈락한 분들에겐) 할 말이 없다.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다”고 한 것 역시 측근들의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김성이·변도윤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변도윤 여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변 장관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으나, 김 장관은 논문 중복게재와 외국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등의 의혹을 이유로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상 자동 임명 절차를 밟았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복지 행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늦출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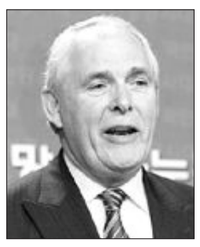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김 장관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청문회와 언론검증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아시아·중동자본 불러모을까

국가경쟁력강화위 합류 데이비드 엘든



새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명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금융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데이비드 엘든(62)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

엘든 회장은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엘든 회장은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인으로, 평생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국제금융맨’으로 통한다. 처음 호주 금융그룹에서 4년을 근무한 이후 영국계 HSBC 그룹 소속으로 중동 및 아시아 각지에서 37년을 보냈으며, HSBC 회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05년 5월 은퇴했다.

홍콩 항셍은행 회장과 스와이어 퍼시픽사 회장, 홍콩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DIFCA 회장 이외에도 국제적 컨설팅 전문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고문을 맡고 있다.

엘든 회장은 서울시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의 일원으로, 총회 의장을 맡기도 했으며 한국과 아시아 및 중동지역 경제에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든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2년 7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직후. 당시 SIBAC 총회 회장이었던 그는 총회 준비를 위해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연합뉴스